

한국 농교육의 정체성 위기: 현상과 과제*

김 병 하**

대구대학교 특수교육과 교수

《요 약》

본 연구는 한국에서 통합교육의 지향과 인공와우 이식수술의 급속한 보급에 따른 농교육의 정체성 위기를 진단하고, 그에 대응한 한국 농교육의 정체성 정립 과제를 제기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우리나라 농교육은 지금까지 분리교육 전통을 유지해 온 가운데 최근 통합교육을 향한 정책 지향성과 그 실천적 괴리에 따른 갈등양상에서 심한 정체성 혼란을 겪고 있다. 한편으로는 최근 청각장애아동에게 인공와우 이식수술이 급속히 보급되어 감에 따라 ‘농’과 농교육의 존재 의의 자체가 크게 위협받고 있다. 청각장애아동에 대한 인공와우 이식수술은 의료공학적 첨단기술의 개가임에 틀림없으나, 수술 후의 장기적 추적에 대한 여러 선행연구들은 그 영향을 결코 긍정적으로 평가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것은 농 세계와 농 언어권을 말살코자하는 일종의 신식민주의로서 윤리적인 측면에서 심각한 문제를 수반한다. 이런 관점에서 본 연구는 일반학교의 질적 재구조화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강요되는 통합교육의 허구성과 성급하게 만병통치처럼 횡행하는 인공와우 이식수술을 비판하면서 농교육 자체의 질적 재구조화를 통한 정체성 정립을 제안한다.

주제어 : 농교육, 정체성, 통합교육, 인공와우 이식수술

I. 서론: 문제의 제기

학교교육으로서 농교육은 특수교육 분야에서 가장 먼저 시작 되었다. 세계적으로 파리에서 1760년 C. M. de l'Epee가 농학교 교육을 처음 시작한 이래, 미국은 1817년에 Hartford에서 T. H. Gallaudet가 농학교를 처음 설립하였으며, 우리나라 농교육은 평양에서 R. S. Hall에 의해 처음 시작된 이래 2009년에 100주년을 맞게 된다. 맹교육과 더불어 가장 오랜 전통을 지니고 있는 농교육은 초기에 전형적인 기숙제 특수학교로 운영되어 오다가 후에 통학제 특수학교로 발전해 오게 되었다. 이처럼 맹교육과 농교육은 분리된 특수교육 체제를 비교적 완고히 유지해 오면서 나름의 특수한 교육풍토와 전통을 형성해 왔다. 우리나라 특수교육 발달사에서 농교육은

* 이 연구는 2006학년도 대구대학교 교내 연구비 지원에 의해 수행된 것임

** 교신 저자 (kimha@daegu.ac.kr)

'70년대에서 '80년대 중반까지만 해도 전체 특수학교 가운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중심 그룹이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1980년대 후반에 접어들면서 전국적으로 특수학급 설치가 급속하게 증가하고, 특수학교 가운데도 정신지체 특수학교가 주류를 형성하게 되어 현재는 전체 144개 특수학교 가운데 정신지체학교가 약 62%(89개교)를 차지하는 반면에 청각장애학교는 12.5%(18개교)에 불과하다. 최근 교육부의 특수교육 실태조사(2007)에 의하면, 전체 특수교육 대상학생 65,940명 가운데 청각장애학생은 불과 4.3%(2,864명) 수준에 머물고 있다. 이처럼 농교육은 이제 전체 특수교육 인구구성 분포에서 마이너리티 그룹으로 전락하여 그 명맥을 유지해 오고 있다. 물론 수적인 기준이 직접적으로 질적 특성까지 규제하는 것은 아니지만, 정책입안 과정(특히 신자유주의적 경쟁체제가 강조되는 상황)에서 상대적으로 불리한 쪽으로 우선순위가 밀려 날 수밖에 없는 현실임을 부정하기 어렵다.

최근 농교육은 통합교육과 인공와우 이식수술이라는 양날의 칼로부터 정체성 위기를 맞고 있다. 통합교육은 인권 차원에서 진작부터 특수교육의 주요 의제가 되어 왔고, 인공와우 이식수술(cochlear implantations)은 최근 의료적 공학기술의 개개로 '청각재활'에 새로운 선풍을 일으키고 있다. 그러나 특수교육 요구아동의 통합교육은 그 이념의 정당성에도 불구하고 그 실천과정에서 복잡한 문제들을 야기함으로써 적잖은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또한, 인공와우 이식술도 의료적 측면에서는 공학기술의 혁신적 성과로 그 파급효과를 장담하고 있으나, 농 세계에서는 생명윤리학적(bioethical) 측면(Komesaroff, 2007)에서 농인에 대한 심각한 인권침해로 문제제기를 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통합교육은 '70년대 중반 이후 일반학교 내에 특수학급 설치가 전국적으로 확산 되어 가면서 주요 관심사로 떠오르기 시작했으며, 정책적 측면에서는 1994년 특수교육진흥법 전면개정에서 '통합교육' 실천에 대한 규정을 명문화함으로써 본격적으로 그 추진에 박차를 가하는 계기가 되었다. 최근 교육부의 특수교육 운영계획에 의하면, '통합교육의 기반구축과 운영의 내실화'를 위해 모든 특수학급 설치학교에 장애인 편의시설을 완비하여 장애학생의 이동권과 학습권을 보장하며, 특수학급이 아직 설치되지 않은 모든 일반학교에 2007년부터 장애학생의 접근권을 보장하도록 명시하고 있다(교육부, 2005). 그리고 금년 4월에 국회를 통과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서는 좀 더 질성적인 측면에서 통합교육 운영계획과 그 실천을 구체화하고 있으며, 역시 새로이 제정된 장애인차별금지법과 지난 해 12월 13일에 공포된 유엔의 장애인권리협약 선포는 특수교육에서 통합교육의 실천을 더욱 광범위하게 촉구하고 있다(김병하, 박경란, 2007). 이런 일련의 동향과 조처에 따라 전통적으로 분리교육 중심체제로 운영되어 온 우리나라 농교육은 심각한 자기 정체성 혼란을 겪지 않을 수 없게 되어 있다.

한편, 우리나라에서도 2005년 1월부터 인공와우 이식술이 의료보험 대상으로 포함됨에 따라 최근 청각장애아동의 인공와우 이식수술이 급속히 확산되어 가고 있다. 특히 일부 기업체에서는 '청각장애아동에게 소리 돌려주기' 운동의 일환으로 사회봉사 차원에

서 이 이식수술을 지원해주고 있다. 그러나 한국농아인협회(2006)에서는 이런 움직임에 대해 당사자의 자기결정권, 수술 후의 부작용에 대한 경고, 농인의 언어권으로서 수어의 인정 등을 내세워 명백히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그러나 대도시의 농학교 유치부 과정에 있는 청각장애유아의 거의 대부분은 인공와우 이식수술을 이미 받았거나 받을 예정이어서 사실상 농학교 초등부과정은 공동화(空洞化) 현상을 초래할 정도로 심각하다. 그런 가운데 중고등부에서는 일반학교에 통합된 청각장애학생들이 농학교로 되돌아 오는 기이한 현상을 보이고 있어, 농교육 정체성은 더욱 혼란스러운 실정이다.

본 연구는 일방적으로 강요하거나 무리하게 서두는 통합교육과 인공와우 이식술이 어떻게 우리나라 농교육의 정체성 위기를 초래하는가에 주목 하면서, 그것에 따른 역기능적 측면을 문제 삼아 다음 세 갈래로 나누어 논의를 전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첫째로, 통합교육 정책과 실천 간의 괴리에 따른 우리나라 농교육의 정체성 위기를 구명 한다.

둘째로, 인공와우 이식술의 급속한 보급에 따른 우리나라 농교육의 정체성 위기를 구명 한다.

셋째로, 우리나라에서 통합교육과 인공와우 이식술의 보급에 따른 역기능적 문제점들을 적시(摘示) 하면서, 한국 농교육의 정체성 정립 과제를 제안하고자 한다.

II. 통합교육과 농교육의 정체성 위기

역사적으로 통합교육은 특수교육의 중요한 의제가 되어 왔다. 그러나 특수교육에서 가장 오랜 전통을 지니고 있는 농교육은 처음부터 ‘농학교’ 중심의 분리교육체제를 완고하게 고수해 왔다. 최근 특수교육계에서 거둬 제기되고 있는 주요쟁점을 다음 세 가지로 집약하기도 한다. 즉, 그 하나는 장애영역별로 분화하여 학생들을 범주화(categorizing)하고 명칭붙임(labeling)에 대한 이점과 단점에 대한 논쟁이고, 다른 하나는 특수교육계에서 대상학생의 사회경제적, 인종적, 문화적 배경에 따라 본의 아니게 ‘장애’를 과잉재현(overrepresentation)하는 것에 관련한 문제이다. 끝으로, 특수교육 수혜 학생의 학업성취에 대한 비판적 문제제기를 들 수 있다(Skrtic, 1995; Sands, Kozleski, and French, 2000).

이들 쟁점을 심층적으로 따져 보면, 결국 특수교육에서 기존의 분리교육체제에 대한 반성을 촉구하고, 통합교육 쪽으로의 패러다임적 선회를 강조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농교육의 입장에서 볼 때, 위의 세 가지 쟁점 가운데 장애의 범주화나 장애의 과잉재현과 관련해서는 특별히 심각하게 문제 될 것이 없다고 하겠으나, 학생의 학업성취 결과의 비판에 대해서는 기존의 농학교 교육에서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하는 것이 사실이다.

그럼에도 최근 특수교육 동향에서 기본적으로 통합교육 쪽으로 전환을 정당화하는 주된 이유는 무엇인가? 그 이유 역시 다음 세 측면에서 생각해 볼 수 있다.

첫째는 기본적 인권과 교육권 보장의 관점에서 통합교육은 강조된다. 국제적 비정부조직 단체인 Inclusion International(2000)에서는 기본적 인권으로서 장애문제를 제기 하면서, 인권은 누구나 제외하지 않고 ‘완전참여’를 보장하는데서 출발한다고 보고 있다. 여기서 완전참여는 교육적으로 ‘full inclusion’을 상정하고 있음은 말 할 나위도 없다. 모든 장애아동은 무상으로 적절한 공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가정, 학교, 지역사회에서 다른 사람과 어울려 유대관계를 형성하고 참여할 권리를 갖는다.

둘째로, 통합교육을 지향하는 학교의 모든 아동들은 공동체적 일원으로 함께 하고자 하는 ‘책임’을 공유한다. 각자가 학교공동체의 구성원으로 함께 참여할 수 있게 하기 위해 학교는 개개 학생의 단점은 적극 지원하고 그들의 장점은 학급전체의 자원으로 활용하는 가운데, 교실문화를 경쟁적인 풍토에서 협동적인 쪽으로 전환해 가야한다. 이것은 Skrtic(2006)이 지적했듯이, 학교가 허약한 민주주의에서 강력한 민주주의 풍토로 전환되는 것을 의미한다.

끝으로, 지금까지 학교조직은 종래의 경직된 전문성에 입각한 수직적 관료체제가 지배해 왔으나, 21세기의 학교조직은 과업중심의 탄력적인 열린 조직으로 전환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는 ‘장애’를 보는 기본관점에서 장애문제를 개인의 병리적 문제로 비극화한 관점에서 학생의 ‘장애’는 근원적으로 기존의 공교육체제가 갖는 학교조직의 병리 문제로 인식하는 입장과 내면적으로 연관되어 있다.

통합교육을 정당화하는 이상과 같은 이유들에도 불구하고, 실천적 문제로서 통합교육은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들로 얽혀 있다. 주지하는 것처럼 제15차 ACMR(Asian Conference on Mental Retardation, 2001) 마닐라 대회의 주제는 ‘통합: 비전에서 실제로’(Inclusion : From Vision To Reality)이었는데, 이것은 아시아 지역에서 통합교육의 문제를 함축적으로 나타낸 적절한 표현이라고 본다. 2005년 국립특수교육원에서 주최한 “아시아-태평양지역의 통합교육에 대한 국제비교”의 보고에 의하면, 이들 지역에서 Australia에서는 최근 통합교육 정책에 따른 실천을 적극 수용하고 있으나, 여타 대부분의 나라들에서는 이상을 쫓는 사람들의 오랜 유산 정도로 통합교육을 평가절하 하는 불만의 목소리가 만만치 않다고 지적하고 있다(Ashman, 2005). 또, 중국의 경우 특수교육 선진국의 통합교육 서비스체제와는 달리, 중국의 공립학교는 특수학교, 특수학급, 통합학급 이 세 가지 유형의 서비스 전달체제를 동시다발적으로 연합해서 추진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현실적으로 중국에서는 교육재정 지원의 부족, 유자격 교사의 부족, 다양한 교육과정 개발과 지속적인 변화의 부족, 교육자원의 평등한 분배 문제, 학교체제의 질적 재구성 문제 등에 걸쳐 통합교육은 여전히 풀리지 않는 문제로 남아 있다(Chen, 2005).

비슷한 관점의 또 다른 보고에 의하면, 홍콩에서 심한 학습장애아동을 위한 통합교육은 그 이념(ideology)의 정당성에도 불구하고 교육 실재로서 상당한 문제가 있음을 지적하면서, 통합교육이 학교교육의 어떤 단계(유치, 초등, 중등)에서 심한 학습장애 학생들에게는 결코 적절하지 않았다고 평가하고 있다(Poon-McBrayer, 2005). 한편, 강경숙(2005)은 아시아-태평양지역 통합교육 국제비교를 종합하면서, 이들 국제비교가 한국 통합교육의 실천에 주는 시사점으로 “우리나라의 경우 특수교사 자원의 질이 높고 통합교육에 대한 열의가 강하지만, 일반교육 쪽에서의 인식부족, 특수교육에 대한 공유된 책무성의 부족, 통합교육 실천을 위한 교육과정 운영의 미흡” 등으로 인해 통합교육 실천에 한계가 있는 것으로 지적하고 있다. 이상을 종합해 보면, 통합교육은 그 이념의 정당성에도 불구하고 실천 과정에서 나라와 장애영역의 특수성에 따라 상당히 복잡한 문제를 구성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 정책적으로 통합교육에 대한 실질적인 관심을 보이게 된 것은 특수교육진흥법 전면개정(1994)과 초중등교육법(1997)에서 통합교육에 대한 규정을 명문화한데서 비롯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런 와중에 우리나라에서 통합교육의 실천을 위한 주요 교두보로 특수학급이 하나의 시험대에 오를 수밖에 없었다. 1994년에 개정된 특수교육진흥법에서 “특수학급이라 함은 특수교육 대상자에게 통합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동법 제2조 4항)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교육부에서는 특수학급 운영형태에서 “전일제 특수학급 운영을 지양하고, 시간제 특수학급으로 운영형태를 전환하여 통합교육을 확대”(교육부, 2005)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

이상에서 보는 것처럼, 우리나라에서 법규와 정책에 반영된 통합교육의 지향은 다음 두 측면의 특성을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김병하, 조원일, 2005). 첫째는 일반학교에 특수학급 설치를 계속 늘려가는 가운데, 이들 특수학급의 시간제 혹은 특별지도실 운영형태를 통해 일차적으로 통합교육을 확산시켜 가겠다는 것이 그 주요특징이다. 이는 마치 1960년대 말에 미국에서 Dunn이 기존의 특수학급 운영의 교육적 효능성을 문제 삼으면서 1970년대 이후에 특별지도실(resource room) 형태의 특수학급 운영이 강조되고, 이 때 통합교육을 메인스트리밍(mainstreaming) 개념으로 인식한 것과 오늘의 한국 상황과 상당히 상통되는 면을 볼 수 있다.

둘째로 우리나라에서 통합교육의 실천을 위한 법적 규정에서는 특수교육 요구학생들이 불편함 없이 접근할 수 있는 각종 편의시설을 일반학교장의 책임 하에 확충하는 것을 특별히 강조하고 있다. 교육부는 ‘통합교육의 기반구축과 운영의 내실화’를 위해 2007년까지 모든 특수학급 설치학교에 장애인 편의시설을 완비하여 장애학생의 이동권과 학습권을 보장하고, 특수학급이 아직 설치되지 않은 일반학교는 2007년부터 모든 일반학교에 특수학급을 설치하여 장애학생의 ‘접근권’을 보장하도록 강구하고 있다(교육부, 2005). 장애학생이 일반학생과 함께 통합교육을 받도록 하기 위해 편의시설의 확충을 통한 접근권 보장이 일차적인 필요조건이긴 하지만 그 자체가 충분조건은 아니다. 이런

특성에 비추어 볼 때 현행 우리나라 통합교육은 ‘물리적 통합’ 수준에 머물고 있어, 향후 교육적 내지는 사회심리적 통합을 위해 훨씬 체계적인 노력을 경주해야 한다.

이런 측면에서 임안수(2004)는 우리나라 통합교육은 법적으로 통합교육의 개념정립을 결여하고 있을뿐더러 세계적 표준과도 거리가 멀다고 비판하면서, 특수교육 대상아동의 발견체제와 평가체제의 구축, 개별화교육 프로그램의 개발과 운영, 특수교육 교사와 관련서비스 전문가 양성의 개선, 부모의 참여와 훈련 등에 걸친 문제점들을 두루 지적하고 있다. 필자는 거시적으로 볼 때, 우리나라에서 통합교육 실천을 가로막는 가장 큰 저해요인은 다음 두 측면에 기인하고 있다고 본다(김병하, 조원일, 2005; 김병하, 박경란, 2007).

그 하나는 학력 혹은 학벌 중심의 ‘경쟁적’ 교육풍토이다. 우리나라에서 학벌 이데올로기와 학력경쟁에 의한 줄 세우기는 날이 갈수록 엄청난 위력을 발휘하면서 합리적으로 설명되지 않는 일종의 ‘교육신화’를 끊임없이 재생산하고 있다. 최근 교육부는 통합교육을 위한 질성적 측면으로 “장애학생과 일반학생이 함께하는 학교문화 창조”(교육부, 2006)를 강조하고 있으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정책적 지향일뿐 실질적으로 학교문화를 지배하는 것은 학력(성적)경쟁과 입시경쟁이다. 이처럼 학교문화가 경쟁적 풍토에서 협동적 문화로 전환되지 않는 한 통합교육은 우리의 현실에서 뿌리 내리기가 어렵다. 다른 하나의 문제는 전국적으로 특수학급 수는 계속 늘어나고 있으나, 통합교육의 기준에서 볼 때 특수학급의 정체성은 더욱 혼란스러운데 있다. 정책 차원에서 볼 때, 특수학급은 통합교육을 위해 설치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일반학교 내에서 몸도 마음도 분리된 ‘외딴 섬’으로 존재하고 있다는 데 심각한 문제가 있다.

통합교육의 실천과정을 면밀히 분석해 보면, 일반적으로 통합교육에 대한 급진적 정책은 특수교육 요구학생 가운데 다수의 주류를 형성하는 학습장애, 지적장애, 언어장애 등을 겨냥하여 추진되어 왔기 때문에 특수교육 인구 가운데 소수의 마이너리티에 해당되는 맹이나 농의 문제에 대해서는 체계적으로 대응해 오지 못한 면이 있다. 이런 측면에서 나카무라(中村, 2005) 등은 “소수집단으로서의 ‘장애인=마이너리티론’을 취하는 완전통합(full inclusion)이 아이러니컬하게도 그 이념에 반해 내부에 시각장애나 청각장애와 같은 장애마이너리티를 창출시켜 버린 것”을 비판하고 있어 주목할 만하다.

최근 농교육계에서 2Bi(bilingual/bicultural) 접근이 제기되고 농인의 ‘언어권’으로서 수화의 위상이 강조되면서(아베야스시, 김병하, 2004), 농학교의 역사성에 기반한 농교육의 정체성이 재평가 받고 있다. 통합교육을 실천하는 교실에서 농학생을 위해 수화통역사를 배치하는 것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결코 아니다. 수화통역사의 배치를 통해 정규 교과과정에서 청각장애학생이 겪는 의사소통상의 어려움에 도움을 줄 수 있겠지만, 보다 중요한 문제는 학급의 동료학생들이 과연 비니어드 심사랍들(Groce, 박승희 역, 2003)이 농인들과 수화로 소통하는 것처럼 농인과 그들이 사용하는 수화에 친숙해져 있는가가 중대한 과제로 남는다.

그러나 최근 우리나라 농교육은 통합교육에 따른 위와 같은 수화통역 지원문제 이전에 상황적으로 특별한 문제와 정체성 혼란에 봉착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 전체 특수학교는 144개교로 늘어난 반면에, 농학교수는 18개교로 전체 특수학교의 12.5%에 불과하다. 게다가 현재 전국의 농학교 재학생수는 1,334명으로 지금부터 20년 전에 비해 무려 3배 이상이나 감소되었다. 전체 특수학교 재학생 가운데 20년 전에는 농학교 재학생수가 약 30%를 차지하고 있었으나, 현재는 전체 특수학교 재학생수(22,963명)의 5.8%(1,334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교육부, 2007). 이처럼 우리나라의 전체 특수학교수와 그 재학생수는 꾸준히 늘어나고 있음에도 농학교수와 그 재학생수는 되려 지수곡선적(指數曲線的)으로 감소되고 있어, 기존의 농학교 정체성은 해를 거듭할수록 더욱 불안정해지고 있다.

농학교 학생수의 감소는 전 세계적인 경향이라 할 수 있으나, 우리나라의 경우 그 감소 추세가 최근에 더욱 급속한 반면에 중국 같은 경우는 아직도 농학교 학생수가 꾸준히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나라에서 농학교 학생수의 급격한 감소는 통합교육을 향한 열망과 그것을 부추기는 인공와우 이식수술의 급속한 파급과 밀접히 연관되어 있다. 따라서 오늘의 농교육에서 통합교육과 인공와우 이식수술은 동전의 양면과 같으며, 이런 현상은 기존 농학교의 정체성 위기를 야기하고 있다.

통합교육의 대전제는 특수교육 요구학생들이 일반학교에서 불편함을 느끼지 않고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질적으로 학교 재구조화(school restructuring)가 전반적으로 이루어진 상태에서 가능하다. 여기서 '질적 재구조화'라 함은 포괄적으로 편의시설 등 접근권 보장뿐만 아니라 교사의 전문성, 교육과정 운영과 지도방법상의 전략 등 섬세한 부분에 이르기까지의 총체적인 '재구조화'를 의미한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통합교육에 대한 정책적 지향과 부모의 열망만 앞서 갈뿐, 현실적으로 일반학교 자체의 통합교육을 위한 전반적인 '질적 재구조화'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통합에 따른 역기능적인 문제가 심각하게 불거지고 있다. 따라서 오늘의 한국 상황에서 농교육 정체성 위기는 중층적(重層的)이고 갈등적이다.

농교육의 입장에서 볼 때, 통합교육에 따른 심각한 문제는 다음 두 측면에서 맞물려 있다. 그 하나는 농학교 유치부 과정에서 청각장애 영유아의 유치(誘置)는 일정 수준에서 확보가 여전히 가능하지만, 이들이 학령기에 달하면 거의가 일반학교에 '통합'을 선택하기 때문에 농학교 초등부 과정은 존재 위기에 놓일 정도이다. 따라서 교육과정 운영도 본의 아니게 대부분의 농학교는 복수학년제 혹은 무학년제로 운영할 수밖에 없는 처지이다. 다른 하나의 심각한 문제는 일반학교로 통합을 선택한 학생들 가운데 중고등부과정에 와서 다시 농학교로 되돌아오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는 사실이다. 결과적으로 '통합교육'으로 인해 농학생 자신만 이중 삼중으로 정체성 혼란과 고통을 감내하게 된다.

연구자가 실제로 대구의 Y농학교 경우 그 실태를 확인해 본 결과, 일반학교로 통합

을 택했다가 다시 농학교로 ‘되돌아’ 온 학생들이 최근에는 10명을 넘어 섰다고 한다. 이런 ‘교육실패’에 따른 일차적 책임은 일반학교를 택한 부모나 학생자신에게 있다기보다는 근원적으로 그 책임은 통합교육을 실천할 질적 학교 재구조화를 감당하지 못한 당해 일반학교 쪽에 물을 수밖에 없다. 이런 의미에서 Skrtic(1995)이 지적했듯이 일반학교에서 완전통합을 실천할 여건이 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무작정 특수교육 요구아동들을 일반학교로 보낼 수 없으므로 농교육을 비롯한 특수교육은 계속 ‘특수’하게 존재해야 할 이유가 있다. 그렇다손 치더라도 분리교육으로서 농교육은 그 책무성을 다하기 위해 더욱 분발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왜냐하면 농학교의 입장에서는 처음 유치부과정에 들어온 학생이 초등단계에서 일반학교로 가더라도 그 쪽에서 적응 할 수 있도록 계속적인 추수지도 내지는 지원을 해주는 네트워크를 구축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그렇게 하는 것은 일차적으로 행정 제도적 문제이기도 하지만, 결과적으로 농교육 쪽에 윤리적 책임은 있다.

이처럼 우리나라의 상황에서 통합교육의 실천을 위한 일차적 책임은 일반학교에 있다고 할지라도 모든 청각장애학생들이 그들의 특수한 교육적 요구에 상응하는 적절한 교육을 받을 수 있게 지원해 주는 책임은 여전히 특수교육으로서 농교육 쪽에도 있다. 이 시대에 ‘학교 재구조화’를 위한 책임은 농학교도 예외일 수 없다. 이런 의미에서 통합교육에 따른 농교육의 정체성 위기는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주는 기회로 전환되어야 한다.

III. 인공와우 이식수술의 확산과 농교육의 정체성 위기

우리나라에서 인공와우 이식수술(cochlear implants)은 1988년에 처음 개시된 이래, 2005년부터 인공와우 이식수술이 보험급여 대상으로 인정됨에 따라 최근에 와서는 청각장애영유아들을 중심으로 급속히 확산되어 가고 있다. 이를테면, 서울의 한 농학교의 유아반(생후 36개월 이전과정)에 입급 되어 있는 청각장애유아들은 2-3세에 이미 인공와우 이식수술을 거의 모두가 받은 상태이며, 이런 청각장애유아들의 대부분은 언어중추에 특별한 문제가 없는 한 빠른 속도로 음성언어를 습득하여 농학교 유치부과정에 남지 않고 일반유치원이나 어린이집으로 ‘통합’을 가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서울애화학교 조혜선 선생과의 면담, 2006). 이과적(耳科的) 입장에서 볼 때, 인공와우 이식수술은 공학과 의학 기술의 개가임에 틀림없으므로, 이과 의사들은 2세에 인공와우 이식수술을 받으면 재활 가능성은 90%, 4세에 하면 60%, 6세에 하면 30-20% 정도 보장된다고 장담하고 있다.

그러나 특수교육의 입장에서 볼 때, 인공와우 이식수술은 결코 만병통치가 아닐뿐

더러, 생명윤리학적(bioethical) 측면에서 심각한 쟁점을 야기하는 문제이기도하다. 인공와우 이식수술이 ‘이과적 수술’ 자체로 성공적이라 할지라도 수술 후에 적어도 3-5년간 체계적인 언어재활훈련을 거쳐야 하고, 수술에 따른 여러 가지 후유증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청각전문가의 입장에서 박미혜(2002)는 인공와우 아동을 위한 재활의 성공을 위해 관련 전문가들 간의 다학문적(multi-disciplinary) 접근, rehabilitation이 아닌 ‘habilitation’의 성격에 입각한 장기적 재활 프로그램의 개발과 운영, 부모의 적극적인 역할 등을 강조하고 있다.

한편, 박상희(2006)는 우리나라에서 인공와우 이식수술 후에 당면하게 되는 현실적 문제들로 (1) 인공와우 이식대상자는 늘어나고 있지만 재활훈련을 받을 수 있는 전문적인 기관이 부족한 것, (2) 수술 후 재활서비스를 받을 수 없는 환경에 있는 청각장애아동이나 성인을 위해 사회복지 측면에서 지역사회 중심의 지원방안이 부족한 것, (3) 비싼 언어치료 비용 부담 때문에 지속적인 치료가 중단되는 경우가 많은 것, (4) 최근에 인공와우 이식수술 기관은 계속 늘어나고 있지만 부모들이 선택할 수 있는 기초자료와 정보가 부족한 것 등을 제기하고 있다. 이상에서 지적한 문제들을 종합해 볼 때, 이식수술 자체는 일회적 의료행위로 끝날 수 있지만, 그 사후에 따르는 현실적 문제들은 훨씬 복잡하고 지속적인 것일뿐더러, 그것은 장기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사회문화적 내지는 경제적 문제 이기도하다.

농학교 교사의 입장에서 김삼수(2006)는 인공와우 이식수술시 고려사항과 예상되는 문제들을 두루 지적하면서 이식수술은 대상자(청각장애아동)의 교육과 관련된 모든 사람들과의 연대의식 하에 이루어져야하고, 수술 후에 학교가 감당해야 할 일들을 감안하여 수술 전부터 학교를 중요한 파트너로 인식해야하며, 수술 전 청각장애아에 대한 언어 발달적 측면, 생활환경적 특성 등을 다면적으로 충분히 고려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여기서 주목을 끄는 것은 수술 결정 과정에서 당해 청각장애학교는 아예 배제되고 의사의 권유에 의해 일방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현실이라는 점이다.

우리나라에서 최근에 인공와우 이식수술이 급속하게 과급되어 가고 있는 것은 일차적으로 의료보험 수혜 때문이기도 하지만, 청각장애자녀가 ‘듣고 말할 수만 있다면’ 모든 것을 걸겠다는 신앙 같은 부모의 열망이 강력하게 작용하고 있다. 게다가 의사들의 낙관적인 권유, 먼저 수술 받은 청각장애자녀를 둔 어머니들의 충동적 권고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수술만능’ 쪽으로 기울게 한다.

한편, 성인 농단체를 대변하는 입장에서 이미혜(한국농아인협회 사무처장, 2006)는 인공와우 이식수술을 반대하는 이유를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다.

부모들에게 인공와우 이식수술은 의학의 발전이 가져다 준 놀라운 선물일 수 있다. 그러나 지금은 수술만하면 들을 수 있다는 현상에 관심이 집중되어 마치 인공와우 이식수술이 농아동을 위한 유일한 희망이자 대안으로 묘사되고 농아동을

둔 부모로 하여금 다른 요인을 배제한 채 오로지 인공와우 이식수술에만 의존하게 할 우려가 있다. 농인의 언어는 수화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선행되고 이를 바탕으로 수화주의, 구화주의의 논의에서 벗어나 종합적인 의사소통 방법을 지향하여 아동이 수용하기에 가장 적합한 의사소통 방법이 개별적으로 형성되어야 한다. 부모들이 자녀의 장애를 병리적인 관점에서 바라볼 것이 아니라 자신의 언어를 갖고 살아가야 하는 아동의 관점에서 판단하고 선택하기를 당부 한다(이미혜, 2006, p.66).

인공와우 이식수술에 대한 위와 같은 경계와 반대는 우리나라에서 성인 농인들의 입장을 대변하는 한국농아인협회의 견해를 우회적으로 대변한 것이라 볼 수 있다. 이처럼 인공와우 이식수술을 보는 시각에 있어 청각장애아 부모와 농성인들 간에 첨예한 대립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의사 입장에서는 수술 자체와 수술 이후 물리적인 청각 개선에 일차적인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과학적으로 청각재활의 성공을 장담하는 경향이 있다. 청각장애자녀를 둔 부모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하든지 그 자녀가 들을 수만 있게 된다면 모든 것을 감내 하겠다는 절박감에서 의사의 수술 권유는 부모들에게는 일종의 복음이자 계시이다. 청각장애자녀의 정상화(normalization)를 위한 ‘청각재활’은 부모 입장에선 삶을 건 열망이자 신앙이다.

여기서 농(deafness)의 문제를 보는 관점에서 농인과 청인의 입장이 첨예하게 갈라진다. 위에 인용한 글의 말미에서 이미혜(2006)는 “부모들이 자녀의 장애를 병리적인 관점에서 볼 것이 아니라, 자신의 언어를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 자녀의 관점에서 판단하고 선택하기를 당부 한다”고 했다. 위의 당부에는 적어도 두 가지 측면에서 중요한 함의를 지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 하나는 “청각장애자녀의 장애를 병리적인 관점에서 보지 말라”는 것으로, ‘청각장애’를 질병과 같은 개인의 비극으로 대상화하여 어떻게 하든지 제거하거나 교정해야 할 문제로 환원하지 말자는 것이다. 이것은 소위 장애학(disability studies)의 담론에서 제기하는 장애의 개인적 의료적 모델에서 사회문화적 모델(Oliver, 1996)로의 전환을 의미한다. 농인의 입장에서 볼 때, 농인은 수화를 사용하는 언어적 소수자로서 마이너리티 그룹일 뿐이지 ‘농’(Deaf)은 결코 제거되어야 할 결함의 표본이거나 장애가 아니다. 이때 대문자 ‘D’는 American이나 Korean이라고 할 때, 어떤 특정한 인종적 집단을 지칭하는 대문자와 같은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 다른 하나는 청각장애자녀가 “자신의 언어를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 자녀의 관점에서 판단하고 선택하기를 당부”한다는 것으로, 부모의 입장이나 기준에서가 아니라 청각장애아 당사자의 입장에서 삶의 양식으로서 그들의 언어권을 선택하고 결정할 수 있도록 열어 놓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런 일련의 문제의식에서 한국농아인협회에서는 일부 민간단체에서 ‘인공와우의 날’을 제정하려는 움직임에 정면으로 반론을 제기하면서 다음과 같이 대통령에게 탄원서를 제출하였다.

1. 민간단체들이 ‘인공와우의 날’을 제정하여 무분별하게 인공와우 시술을 부추기지 못하도록 행정기관에서 통제할 것.
2. 부득이하게 인공와우 시술을 시행하게 될 경우 청각장애아동 당사자의 자기결정권을 보장하여야 하며, 성인이 된 이후라도 이를 인지할 수 있도록 ‘결정권’에 대한 근거를 남기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것.
3. 인공와우 수술이후에 발생하는 모든 부작용에 대한 충분한 연구와 논의가 이루어질 때까지 지방자치단체와 민간단체 또는 기업들이 제공하는 인공와우 수술에 대한 재정지원을 삭감 혹은 중단하게 할 것.
4. 인공와우 시술은 청각장애인의 차별을 제거하기 위한 유일한 대안이 아니다. 따라서 청각장애인의 차별문제를 근본적으로 풀기 위해서는 수어를 공식 언어로 인정하고, 농인의 사회·문화적 접근권과 생존권을 보장하기 위한 정책과 예산을 편성할 것.
(한국농아인협회, 2006. 1. 20)

위의 탄원에서 보는 것처럼 농인의 입장에서 인공와우 이식수술이 마치 정신지체 여성에게 불임시술을 강요하는 것과 같은 일종의 ‘인권침해’로 인식되고 있다. 위의 탄원 내용이 주는 시사점은 크게 다음의 세 갈래로 해석해 볼 수 있다.

첫째는 일부 민간단체들이 ‘인공와우의 날’을 제정하고자 하고, 그 수술에 대한 재정지원을 펼치는 것에 대해 농인의 입장에서 ‘농’을 제거해야 할 질병으로 대상화하고, 그것을 사회적 계몽으로 치켜세우는 세력을 크게 경계하고 있다. 의료적 계몽의 차원에서 이미 ‘눈의 날’이나 ‘귀의 날’이 있고, 사회 계몽의 다른 한 편에서 ‘장애인의 날’이 제정되어 있다. 농인의 입장에서 ‘인공와우의 날’보다는 ‘농(인)의 날’ 제정이 훨씬 품위 있는 사회의 모습으로 인식되고 있다.

둘째로 인공와우 이식수술 전(前) 단계에서 ‘당사자의 자기결정권’의 문제는 상징적으로나 실질적으로나 꽤 중요한 의미를 지니므로, 일종의 ‘합당한 절차’(due process)가 공적으로 숙고되고 존중되어야 한다. 나이가 어리다는 핑계로 부모가 일방적으로 결정해버리고 당사자의 입장을 도외시 한다면 이 역시 중요한 인권침해이자 강요된 선택일 수밖에 없다. 부모나 보호자는 이식수술 이후에 그것이 ‘당사자’에게 미칠 정체성 혼란(기술적 위험부담을 포함해서)을 당사자의 처지에서 거듭 숙고 할 뿐더러, 당사자에게 어떤 형태로든 자기결정의 기회를 제 하기 위해 다면적인 노력을 기울여야한다. 왜냐하면 수술은 최후의 선택일뿐더러 한번 행해지고 난 후에는 결코 돌이킬 수 없으며, 그것이 미치는 영향은 당사자에게 일생을 통한 삶의 명에이기 때문이다.

셋째로 위의 탄원에서 “공적 언어로서 수어(手語)의 인정, 농인의 사회문화적 접근권과 생존권 보장”에 대한 요구는 농인에게 절실한 기본적 생존권에 해당하는 문제이다. 그럼에도 우리나라의 농교육 현실에서 여전히 구화우선주의가 지배적이고, 수어는 학년이 올라감에 따라 마지못해 차선택으로 도입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농인의 언어적 권리’(아베, 김병하, 2004)로서 수어에 대한 재인식이 절실히 요구된다. 우리나라의 농교

육에서 청인중심 구화주의로부터 농인중심 수화주의에로의 전환은 여전히 해묵은 과제가 되고 있다.

이상에서 논의한 일련의 과정에서 우리는 인공와우 이식수술에 대한 단순한 찬반입장의 제기를 넘어, 그것이 미치는 실질적이고도 장기적인 영향에 대한 과학적인 평가와 더불어 그에 따른 윤리적 문제를 체계적으로 논의해 볼 필요가 있다.

의료계와 보건단체들은 인공와우 이식을 혁신적인 과학기술의 개가로 찬양하고 있지만, 수술 결과의 장기추적에 의하면 결코 낙관할만한 일이 아님을 환기 시켜주고 있다. 이를테면, 미국에서 '90년대(1991년에서 '97년까지)에 인공와우 이식수술을 받은 3세미만의 134명 청각장애유아에 대해 수술 후 1년에서 5년이 경과 한 후에 청각을 통한 어휘이해(aural open-set word recognition) 검사를 실시한 결과 선천적으로 농아동인 경우 단어이해 능력에 미미한 변화가 있었으며, 보고된 아동의 약 80%는 뚜렷한 변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Lane, 1999). 특히, 수술을 받은 아동들의 평균연령이 7세가 되어도 그들의 영어능력은 3세 수준에 머물고 있었으며, 이들은 ASL(미국수어)를 사용하는 농아동 보다도 언어수행능력(읽고 쓰기 능력)이 뒤지는 것으로 밝히고 있다. 이 보고가 비록 최근 자료가 아니란 점에서 다소 한계가 있다고 하더라도 지금의 우리나라 상황에 시사해 주는 바가 적지 않다고 본다.

또한, Kelsay와 Tyler(1996)는 인공와우 이식수술을 받은 아동의 부모들에게 수술 후의 기대와 실제에 비추어 그 수술의 이점과 단점을 물어 본 결과, 그들 중 12%만이 교육적 진전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는 것이다. Lane(1999)은 결론적으로 인공와우 이식수술이 갖는 장기적 이점은 미미할뿐더러, 그것은 어떤 방법으로 그 예측을 산출하느냐에 따라 상당히 달라질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앞서 지적했듯이 인공와우 이식수술은 '농'의 문제를 보는 관점에 따라 심각한 윤리적 문제를 수반한다. 기무라(2002)는 '언어적 소수파로서 농인'을 보는 입장에서 인공와우 이식에 대해 다음과 같이 반론을 제기하고 있다.

농인사회를 위협하는 또 하나의 문제가 인공와우 삽입이다....(중략) “농을 치료 한다”고 하는 노력 중에서도 가장 궁극적인 이 기술은 농인사회로부터 거센 반발을 초래하고 있다. 중도실청인과 달리 선천성 농인에게 있어 ‘농’은 갑자기 닥쳐온 재난이 아니다. ‘농’은 태어났을 때부터 계속 자기 자신의 일부이고 바로 “자기 자신의 증거”이다. 이러한 사람들에게 있어서 ‘농’은 치료해야만 하는 ‘장애’가 결코 아니다. 유전성 농인의 경우는 더욱더 그렇다. “유전성 농을 예방 한다”고 하는 사고방식의 근본에는 우월주의가 있고 거기에는 윤리적인 문제가 크게 가로 놓여 있다(기무라, 2002, p.36).

태어날 때부터 '농'인 경우 그것은 자신의 정체성이자 증거이다. 특히, 유전성 농인 경우 농의 예방과 치료는 소멸시켜야 할 질병으로 대상화되기 때문에 우생학적인 측면

에서 심각한 윤리문제를 제기 한다. 결국, 인공와우 이식수술을 적극 지지하는 사람들의 사고방식 근거에는 “이 지구상에서 농인들은 짝 쓸어버려야 한다.”(미국 농인 지도자인 Bienvenu의 항의, 기무라, 2002에서 재인용)는 생각을 깔고 있는지도 모른다. Lane(1999)은 인공와우 이식수술에 따른 문제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끝에 다음과 같은 결론에 도달하고 있다.

오늘날 청각장애유아들에게 인공와우 이식수술을 권장하는 공중보건 정책은 따지고 보면 과학적으로나 윤리적으로나 상당한 문제를 안고 있다. 그렇지만 농과 청각 세계의 상대적 가치와 완벽한 이식수술에 의해 제기되는 윤리적 문제들에 대한 이론적 논의를 전개함에 있어, 목하 일어나고 있는 냉엄한 실재(reality)를 흐릿하게 오도하지 말아야 한다. 오늘 날 인공와우 이식수술이 광범위하게 파급되어 감에 따라 아마도 대부분의 농아동들은 언어능력의 결함에서 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나 심리적으로 정체성 위기에 처하게 됨으로써 예기치 못한 삶의 손실을 겪어야 할 것이다(Lane, 1999, p.255).

인공와우 이식수술에 대한 이상과 같은 결론은 “수술만 하면 모든 것이 해결 된다”고 쉽게 낙관하는 우리나라의 성급한 판단에 대한 준엄한 경고일 수 있다. 이처럼 청각장애아동에 대한 인공와우 이식수술은 기술공학적 내지는 의학적 성공여부의 문제를 넘어서는 농인과 농의 세계에 대한 언어권과 인권침해의 문제, 나아가 농문화의 성원으로 살아가는 농인을 부정하는 우생학적인 문제 등(곽정란, 2006)에 이르기까지 심각한 윤리문제를 야기한다.

장기적 안목으로 볼 때, 청각장애유아에 대한 인공와우 이식수술은 기술공학적으로나 의학적으로 보다 세련된 완벽성을 추구하게 될 것이고, 반면에 농성인들이 중심이 된 농문화와 수어의 독자적 언어권은 보다 확고한 위치를 가지게 될 것이다. 이런 상반된 상황에서 ‘윤리와 선택’의 갈등은 끊임없이 제기될 수밖에 없다. 이런 관점에서 Christiansen과 Leigh(2002)는 부모의 선택과 관련하여 “과연 부모들은 당사자의 동의 없이 청각장애자녀의 인공와우 이식수술을 선택할 권리가 있는지 없는지, 또 수술의 시기가 대단히 중요함(빠를수록 좋다는)에도 아동이 스스로 결정할 수 있을 때까지 유보해야 할지 어떨지가 문제”라면서 그 쟁점을 제기하고 있다. 여기서 그들은 윤리적 관점에서 인공와우 삽입을 지지하는 입장과 반대하는 입장을 일종의 시혜인가 아닌가, 유해성(maleficence)이 인정 되는가 않는가, 선택의 자율성이 존중 되는가 않는가, 사적 프라이버시가 존중 되는가 않는가하는 측면에서 양면의 입장에 대응하여 기술하고 있다. 이 경우 그 판단은 각자의 윤리적 기준에 따라 숙고해야 할 과제로 남겨진다.

한편, 농 공동체(Deaf community) 존재를 부정하는 인공와우 이식을 신식민주의(neocolonialism)로 인식하는 입장도 있다. Ladd(2007)는 ‘신식민주의와 수어인(sign language peoples)’을 논의하면서 ‘농’에 대한 신식민주의 파도가 메인스트림인, 인공와우

이식의 과급, 유전의 인위적 수정 등 세 갈래로 몰아치고 있다고 보고 있다. 그는 ‘농’을 향한 신식민적 정책이 ‘통합’교육, 인공와우 이식수술, 인위적 유전자 조작이라는 ‘제국주의적 슬로건’을 앞세워 휘몰아치고 있다고 경계한다. 물론 내면적으로 보면, 이 세 개의 신식민주의 파도는 서로 밀접히 맞물려 있는 상황이다.

인공와우 이식에 대해 농단체들이 제기하는 주된 반론은 (1) 아동기의 인공와우 이식이 성인기에 이르러 어떤 결과를 초래할 것인지에 대해 아직까지 충분히 보고되지 않았다는 것, (2) 한 번 인공와우 이식을 하면 아동 스스로 그것을 되돌릴 능력이 없다는 것, (3) 나이 어린 아동들에게 그들 스스로의 선택에 따른 결정권을 부여하지 않는 절차상의 부도덕성과 윤리적 침해의 문제, (4) 장기간에 걸친 신체적 손상에 따른 위험 부담 등이다(Ladd, 2007). 그럼에도 구화지지자들의 세력은 현실적으로 농단체의 세력보다 훨씬 광범위하고, 게다가 전문가들은 이 문제에 대해 대부분 ‘침묵’을 유지함으로써 결과적으로 반대 목소리는 잦아드는 형국이다.

그러나 정의나 윤리 문제는 결코 다수의 힘이나 세력에 의해 좌지우지 될 수 있는 그런 성질의 것이 아니다. 이런 관점에서 최근 Lane(2007)은 ‘농 세계’(Deaf-World)는 하나의 소수 인종 그룹으로 볼 수 있다고 주장 하면서, ‘농 세계’는 소수 인종이 가지는 내면적 특징들이라 할 수 있는 “집합 명칭, 공동체적 감정, 행동 규범, 분명한 가치기준, 지적 체계, 습관, 사회구조, 언어, 예술, 역사, 혈족관계” 등을 두루 갖추고 있다는 것이다. 이런 측면에서 그는 미국의 농 세계에서 농인을 위해 농인에 의해 일차적으로 수행되는 활동과 농인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청 세계’(Hearing-World)의 활동을 구분하면서, 농인들은 그들의 언어와 문화를 계속 촉진시켜 가고, 청인 세계와는 차별화 되는 그들의 경계선을 구축해 가면서 그들만의 차별적인 자기 정체성을 더욱 견고히 쌓아 가고 있음에 주목하고 있다.

이상에서 살펴 본 것처럼 인공와우 이식수술에 대한 찬반논쟁은 청인세계와 농인세계 간에 첨예한 대립양상을 보이고 있어, 이는 마치 농교육계에서 18세기 후반 이래 제기된 구화주의자와 수화주의자 간의 치열한 방법논쟁을 연상케 한다. 이런 첨예한 대립양상은 결국 농교육의 정체성을 극히 혼란스럽게 한다.

IV. 한국 농교육의 정체성 정립을 위한 과제

우리나라 농교육은 약 100년의 전통을 쌓아 왔고, 1970년대 말까지만 해도 우리나라 특수학교의 주류를 형성해 왔다. 그러나 ‘80년대 이후에 정신지체 특수학교가 급속하게 증가함에 따라 양적인 면에서 발달장애 쪽이 주류를 형성하게 되었다. 그러는 가운데 농교육은 상대적으로 많이 위축되면서 기존의 농학교마저도 지역에 따라 정신지체

특수학교로 전환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기에 이르렀다.

또한 '90년대 이후에 우리나라 특수교육은 정책적으로 통합교육을 적극 지향하게 되고, 더욱이나 인공와우 이식술이 의료보험 수혜 대상이 되면서 최근 청각장애유아에게 인공와우 이식이 급속히 보급되어 가고 있다. 특히, 통합교육과 이공내이 이식은 내면적으로 밀접히 연관되어 상승작용을 하기 때문에 기존의 농교육은 심각한 자기 정체성 위기를 맞이하고 있다. 이하에서는 우리나라 농교육이 최근 당면하고 있는 이런 정체성 위기로부터 다시 자기 정체성을 재정립하기 위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를 논의 하고자 한다.

1. 통합교육과 농교육의 정체성 정립

농교육은 처음부터 기숙제 혹은 통학제 특수학교의 형태를 전형적으로 취해 왔지만, 농교육에서 구화교육에 대한 관심과 함께 정상화(normalization)를 향한 '통합' 문제는 진작부터 주요 쟁점이 되어 왔다. 일반적으로 특수교육 요구학생들에 대한 통합교육을 논의할 때, 일차적으로는 그들의 배치장소(where)와 관련한 소위 물리적 환경에 있어 통합을 강조하면서, 교육의 과정에서 그렇게 해야 할 당위성으로서 통합의 이념(philosophy)을 내세우게 된다. 교육배치 장소의 기준에서 볼 때, 농교육은 분리교육의 전통을 가장 오래 유지해 오고 있지만, 장기적으로 볼 때 '분리에서 통합으로'의 배치장면상의 주요 변화를 보이고 있음이 또한 사실이다.

이를테면, 미국의 경우 1817년에 Hartford 농학교(지금의 American School for the Deaf)가 전형적인 기숙제 농학교로 설립된 이래, 1975-76년 기준으로 전체 농교육 인구 가운데 기숙제 등록생은 전체(43,780명)의 42%이고 통합교육을 받는 인구는 20%에 불과 했다(나머지 약 38%는 통학제 학교나 학급에 등록되어 있었음). 그러나 1993년에는 전체 농학생(43,817명) 가운데 기숙제 농학교 등록생은 불과 22%인 반면에 통합교육을 받는 인구는 51%를 넘어 섰고(Schildroth, Hotto, 1994), 현재는 약 65% 이상이 일반학교에서 통합교육을 받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현재 교육 배치장면 기준으로 볼 때, 미국은 약 90% 이상의 특수교육 요구 등록생이 통합교육(부분통합을 포함해서)을 받는 것으로 '통합'의 일반화를 내세우지만, 기실은 장애특성에 따라 여전히 사정은 복잡하다. 단지 '통합'의 계량적 비교에서만 보더라도 위에서 보는 것처럼 농영역과 전체 특수교육 요구학생들의 통합교육 인구구성비에 있어 엄청난 격차를 나타내고 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경우 교육배치 장면과 농학교 인구감소 경향을 종합해서 보면, 사정은 좀 더 특이하고 복잡하다. 최근 20년 동안 우리나라 농학교 인구는 무려 3배 이상이나 감소되었지만, 문제는 이들 청각장애학생들이 과연 일반학교에서 "적절한 통합교육 지원을 받고 있는나"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통합교육 정책과 실천을 위한 입법 규정은 명문화 되어 있으나, 일반학교에서 통합교육을 실천할 수 있게 하는 실질적인 지원

대책은 거의 전무한 상황이다. 교육 현장에서 ‘통합’은 비전(이념) 수준에서가 아니라 교육 실재(reality)의 변화를 의미하는 것이어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나라에서 통합교육을 향한 목소리는 높아도 하나의 실재로서 통합교육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볼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 농학교 인구는 계속 감소추세를 나타내면서 기이하게도 농학교 중등 과정에는 일반학교에서 되돌아오는 농학생수가 해를 거듭할수록 늘어나고 있다. 껍데기만 있지만, 이것이 오늘날 한국 농교육의 기구한 운명을 상징적으로 잘 드러내는 단면이다. 이런 모순 구조로부터 필자는 다음 두 측면에서 한국 농교육 정체성 정립을 위한 과제를 제기한다.

첫째로 일반학교는 모든 특수교육 요구학생들이 불편함 없이 교육을 받고 극히 사소한 부분에 이르기까지 이들 학생들이 소외되지 않고 사람대접 받으며 교육 받을 수 있도록 질적으로 재구조화(restructuring)되지 않으면 안 된다. 말 그대로 특수교육 요구학생들이 일반학교에 완전통합(full inclusion)되기 위해서는 모든 일반학교가 그에 상응하여 누구나 ‘적절한’ 교육을 받을 수 있을 정도로 총체적으로 질적 재구조화가 되어 있어야 한다.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 농학생을 비롯해서 특수교육 요구학생들을 통합교육이라는 이름으로 일반학교로 내 보낸다면 이것은 아주 ‘부적절한’ 조치일뿐더러 무책임한 일이다. 이런 경우에 우리는 ‘통합’을 위해 일반학교에 특수아동을 도매금으로 바겐세일 한다는 비난을 면할 도리가 없다.

통합교육을 위해 일차적으로 일반학교 스스로가 모든 특수교육 요구학생들이 불편함 없이 품위 있는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개혁되어야겠지만, 어떤 경우에도 ‘개혁’은 저절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런 의미에서 진정 우리가 모든 청각장애아동들이 일반학교에서 불편함 없이 완전하게 통합되기를 원한다면, 일반학교가 질적으로 재구조화 될 수 있도록 우리 농교육자들은 끊임없이 일반교육을 자극하고 안내해야 한다. 이를테면, 청각장애학생들이 일반학급에서 그들이 원하면 언제든지 능숙한 수화 통역인을 배치해 주고, 수업내용을 속기록해 주는 소위 Note Taker 서비스가 원만히 지원될 수 있도록 농교육 쪽에서 부단히 촉구하여야 한다. 이런 의미에서 필자는 우리 특수교육(학)자들은 일반교육의 언저리에서 특수하게 존재할 것이 아니라, 일반교육의 선두에서 그 교육의 핵심이 바뀌어 지도록 자극하고 안내하는 개혁의 주도자여야 한다고 주장해 왔으며,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마침내 ‘특수교육주의자’ 반열에 들 수 있다(김병하, 2005).

둘째는 통합교육을 위해 모든 학교가 질적으로 재구조화 되어야 하듯이 당대 농교육이 자기 정체성을 재정립하기 위해서는 스스로 농교육의 질적 재구조화를 위해 ‘환골탈태’(換骨奪胎)해야 한다. 농교육의 정체성 위기는 바깥으로부터 오는 것이기도 하지만, 시대정신에 걸맞게 농교육 내부로부터의 자생적인 개혁 노력이 부족했기 때문 일수도 있다. 우리나라 농교육은 ‘정상화’를 향한 구화중심주의에 가위가 눌러, 토털 커뮤니케이션에 대해서도 소극적이었고 2Bi 접근은 아예 외면하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나라에서 토털 커뮤니케이션 접근에 대해 공식적으로 관심을 가지게 된 것은 1983년 말에 개정 고시된 소위 제5차 특수학교 교육과정 개정에서 토털 커뮤니케이션 접근이 도입된 때부터라 할 수 있다. 즉, 당시에 농학교의 '요육활동'에서 종래에 강조되어 온 '구화일변도'의 언어지도 접근을 탈피하여, 농학생의 독특한 의사소통 요구에 따라 개방적으로 다양한 의사소통 양식의 활용을 강조하는 토털 커뮤니케이션 접근이 도입되면서, 농학교 정규교과 활동에서 수화지도가 도입될 수 있게 열어 놓았다. 그리고 이 무렵에 필자는 영국의 농교육자 리오넬 에번스(Lionel Evans, 1982)의 '토털 커뮤니케이션: 구조와 전략'(김병하 역, 1984)을 번역하여 우리나라에 소개하기도 했다. 그러나 농교육 현장에서는 대부분의 나라들이 그러했듯이 여전히 구화주의를 우선하면서 차선택으로 수화를 사용하거나, 아니면 구어와 수어를 동시에 병용하는 동시법(simultaneous method; 줄여서 Sim-Com이라고도 함) 정도로 토털 커뮤니케이션을 왜곡 하여 평가절하 하였다.

그 후 '90년대에 우리나라에서도 소위 2Bi(Bilingual/Biculture, 즉 이중언어와 이중문화) 접근이 소개되고 그 적용을 위한 연구가 다소 이루어 졌으나(최성규, 1999, 권순향, 2001, 김영옥, 2004 등), 현장에서 장기적으로 그 적용효과를 추적해 보고자하는 실천적인 노력이 턱없이 부족했을 뿐만 아니라, 우선 청각장애 자녀를 둔 부모들에게 2Bi 접근은 전혀 긍정적으로 수용되지 못했다. 이것은 부모들의 구화주의에 대한 막연한 열망 때문이기도 하지만, 농교육자와 전문가들의 확신에 찬 일관된 노력이 부족했던 것도 사실이다. 일본에서도 공식적으로는 1991년 동경에서 개최된 '세계농인대회'에서 "이중언어 접근에 대한 지지"를 택했지만(기무라, 2002), 농교육 현장에서는 이렇다 할 변화가 없었다. 그러나 덴마크에서는 1982년부터 1992년에 이르기까지 10년간 농학생들에게 이중언어 능력 지도를 도입하여 그 성과를 장기 추적해 본 결과, 이중언어 프로그램에 참여한 농학생들의 표준학력이 기본적으로 일반학생들의 평균수준과 차이가 나지 않는다는 주목할 만한 결과를 제시하여 그 성과를 입증하고 있다(Lewis 등, 1995; 최성희 역, 2006에서 재인용).

이상과 같은 결과가 우리에게 시사해 주는 것은 이 시대에 '농학교의 존재 가치'가 여전히 긍정적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농교육 자체가 해묵은 '언어지도 방법논쟁'에서 환골탈태하여 농교육의 책무성(accountability)을 보증할 수 있도록 질적으로 재구조화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사실이다. 이런 의미에서 Schildroth와 Hotto(1994)가 농학생과 완전통합을 논의 하면서 그 주제에서 "누가 제외되기를 원하겠는가?"라는 질문을 제기한 것은 주목할 만하다.

농아동의 부모들은 가능하면 그들 자녀가 제한된 환경으로부터 '제외되기'(excluded)를 원하지만, 또한 이들 부모들은 자기 자녀가 학업성취, 정서적 성숙, 사회적 접촉 등에 걸쳐 그들 자신의 문화적 여건에서든지 아니면 그와 다른 기숙제나 통학제 농학교 일지라도 확실히 축진을 보장해주는 배치 장소에 '포함되기'(included)를 원한

다는 것이다. 그들은 원래 부모가 원하지 않던 것이라 할지라도, 농인을 청인과 같이 되도록 하기 위해 일찍이 Sitting Bull이 말한 대로 “독수리를 까마귀가 되게 할 수는 없는 일”(Schildroth, Hotto, 1994, p. 28)이라고 했다. 이처럼 중요한 것은 결국 농학생 개인의 자기실현을 위해 어떤 교육조건과 환경이 주어지느냐가 중요하지 ‘통합이나, 분리나’ 라는 것이 궁극적으로 문제가 될 수는 없다. 바로 이런 이유로 오늘날 농교육이 자기 정체성을 확고히 정립하기 위해 질적 개혁을 내부로부터 서둘러야 할 수 없다. 결코 청각장애아동은 통합교육의 실험대상이 될 수 없으며, ‘통합’이라는 명분으로 독수리를 까마귀가 되게 방치할 수 없는 법이다.

2. 인공와우 이식과 농교육의 정체성 정립 과제

지금 우리나라에서 청각장애영유아를 대상으로 한 인공와우 이식수술은 해를 거듭할수록 급속히 확산 되어 가고 있으나, 이 문제에 대해 일부의 농성인들을 중심으로 한 농단체에서 만 반대 입장을 제기할 뿐, 농교육계는 대개 침묵을 유지함으로써 일종의 ‘중립적’ 입장을 취하고 있다. 그러나 달리는 기차 위에 결코 중립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제 우리나라 농교육계는 인공와우 이식술의 파급에 따른 농교육 정체성 혼란을 극복하기 위해서 인공와우 이식술이 아동발달에 미치는 장기적 영향, 특히 그것의 사회 문화적 및 심리적 영향, 나아가 이 문제에 대한 윤리적 쟁점 등에 걸쳐 명백하게 입장을 표명해야 한다.

최근 Komesaroff(2007)는 인공와우 이식술을 생명윤리학의 입장에서 인식하면서, 이제 인공와우 이식술은 ‘세계화’의 파고를 타고 국제적으로 ‘농’의 문제가 주요 관심사로 떠오르게 했다고 보고 있다. 미국에서 두 살짜리 아이가 인공와우 이식술을 받게 된 것은 1990년부터이지만, 그 후 1998년에는 생후 18개월 된 영아에게 이식술을 시행하였고, 지금은 생후 5개월 된 신생아에게도 이식되고 있다고 한다. 전 세계적으로 인공와우 이식수술을 받은 사람이 1990년에는 5천명 정도였으나, 1997년에는 1만6천명으로 늘어났고, 2002년에는 거의 6만명에 달했는가 하면, 2005년에는 10만명을 넘어섰다고 한다(National Institute on Deafness and other Communication Disorders, 2002, 2006). 그러나 인공와우 이식술을 받은 사람에 비해 실제로 그 사용자 수는 줄어들었다고 하며, 이식술을 받고도 실제로 사용하지 않는 사람들의 수가 아직은 정확히 알려지고 있지는 않다고 한다(Christiansen, and Leigh, 2002).

한편, 우리나라에서 지금까지 인공와우 이식술을 받은 사람은 모두 3천여 명으로 추산 되는데, 2006년 6월 기준으로 Cochlear 회사 기기로 시술 받은 사람만 약 2천여 명이 넘고 Advanced Bionics사의 기기로 받은 사람이 약 6백여 명, Med-EL사 기기로 이식 받은 청각장애인은 약 80명 정도 된다고 한다(박상희, 2006). 전 세계적으로 Cochlear

사 인공와우 이식이 약 70%의 시장을 점유하고 있는 데, 이 회사는 미국, 아시아 태평양 지역 국가들, 유럽과 중동에 걸쳐 70개국 이상에 걸쳐 판매망을 뻗치고 있다(Komesaroff, 2007). 이제 많은 나라들에서 아동기에 인공와우 이식술을 받는 것이 날 때부터 농인 경우 전체의 90-95%정도인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1990년까지만 해도 농 아동 가운데 10명 중 1명꼴로 인공와우 이식술을 받았지만, 2002년에는 두 명 중 한 명 꼴로 수술을 받는 실정이라고 한다(Christiansen과 Leigh, 2002).

이처럼 세계적으로 아동기에 인공와우 이식술을 받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늘어남에 따라 구어와 수어간의 역사적 다툼은 새로운 양상으로 심화되어 가고 있다. 동시에 유전공학 입장에서 본 농의 성질, 의료적 중재, 인공와우 이식술을 넘어서는 농 공동체(Deaf community)의 미래 등에 대한 논쟁이 계속 끊이지 않게 될 것이다. Komesaroff(2007)는 생명윤리학적인 측면에서 볼 때, 인공와우 이식술에 대한 논쟁에서 농인의 목소리에 일차적으로 귀를 기울일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이런 측면에서 Lane(2007)는 대문자 'Deaf'의 '농'은 의료적 측면에서 사용하는 농(deaf)과 개념적으로 명백히 구분 되어야 한다면서, 그는 농인은 자동적으로 '수어인'(Sign Language Peoples)이자 '농공동체'의 구성원이라고 규정했다.

특히, Lane(2007)는 선천성 농아동을 대상으로 인공와우 이식술이 계속 과급되는 상황을 농인(수어인 혹은 농공동체)에 대한 '신식민주의'(neocolonialism)로 개념화 했다. 즉, 그는 생명공학적 신기술을 앞세워 인공와우 이식술이 농세계를 뒤흔들면서 침투해 오는 상황을 '신식민주의'로 명명하고 있다. 이런 맥락에서 Alderson(2007)은 장애와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정책에서 장애인 당사자의 입장이나 인식에 관계없이 장애에 대한 의료적 처치와 결정이 이루어져 왔으며, 더욱이나 나이 어린 장애아동이 판단하기에 앞서 그를 보호하는 부모의 입장에서 모든 것이 결정되어 버리기 때문에 인권의 주체로서 모든 장애아동은 자신의 삶을 관리하고 결정할 권리와 능력이 있다는 것을 간과하는 비윤리적인 현실을 문제 삼고 있다.

같은 논문에서 Lane는 '농세계'(Deaf-World)가 자신의 정체성을 정립하기 위해서 장애명칭(the disability label)을 거부해야 한다면서, 그 이유를 다음 네 가지로 들고 있다. 즉, (1) 장애명칭을 결정하는 일을 더 이상 "컴퓨터가 하는 대로 해서는 아니 된다"는 것이고, (2) 장애명칭은 농아동들에게 더 큰 위기를 가져다주고, (3) 나아가 장애명칭은 농세계의 생존 자체를 크게 위협하며, (4) 장애명칭은 잘못된 해결책을 증대시킬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Lane, 2007). 위 네 가지의 이유를 통해 '청각장애' 명칭이 미치는 영향과 그에 따라 인공와우 이식수술이 정당화 되는 것을 어떻게 거부할 수 있어야 하는가를 해독할 수 있어야 한다. 이제 우리가 농장애학(Deaf studies)의 입장에서 볼 때, '농'의 문제는 더 이상 개인의 의료적 문제가 아니라 '정치화'(politicalization)의 주요 의제임을 인식하여야 한다.

우리나라에서 인공와우 이식수술을 받은 후 청각장애아동의 발달적 측면에서의 총

체적 정보는 아직 대단히 부족한 실정이다. 이런 상황에서 스웨덴에서 인공와우 이식을 한 농아동의 심리적 발달에 대한 장기적 추적연구는 우리에게 중요한 시사점을 줄 수 있다. 오늘 날 스웨덴의 농아동들은 거의 90%가 양이(兩耳) 인공와우 이식술을 받는 실정이라서 발달적 측면에서의 장기적 정보는 꽤 중요하고 절실했을 것이다. Preisler(2007)는 스웨덴의 장기적 연구 결과를 다음과 같이 보고하고 있다. 즉, 인공와우 이식술을 받은 아동은 가정과 학교에서 음성언어로만 의사소통하는 환경에 노출 되었을 때, 의사소통상의 어려움을 겪어야 했으며, 그들의 언어기능이 청각환경에서 충분히 작동하기에는 여전히 부적합한 면이 있었다는 것이다. 특히, 인공와우 이식술을 받은 청각장애아동은 일반 동료아동들과 상호작용 할 때 마치 난청아동들이 체험하는 것과 아주 비슷한 처지에 놓인다는 것이다.

다른 한 연구(Wald and Knutson, 2000. Preisler 2007에서 재인용)에서 인공와우 이식술을 받은 아동과 그렇지 않은 청각장애아동들에게 농정체성 발달측도(Deaf Identity Developmental Scale)로 평가해 본 결과, 두 집단 모두 '이중문화'(bicultural) 정체성에 가장 높은 평정치를 보였으며, 그들은 '농'을 부정하지 않았지만 청인사회의 일부로 편입되기를 원했다고 한다. 이런 결과에 비추어 볼 때, 그들에게 음성언어가 자신의 삶에 중요한 것과 마찬가지로 수어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농아동의 10명 중 아홉은 일상생활에서 음성언어에 노출된 가족들과 함께 생활하지만, 그들수록 이들에게 이중문화 정체성을 정립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면 수어 환경에 노출되는 기회를 제공해주는데 보다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이처럼 이중언어 상황을 마련해 줌으로써, 결과적으로 인공와우 이식술을 받은 청각장애아동들은 긍정적 심리발달과 보다 나은 삶의 질을 향유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Preisler, 2007). 이런 일련의 연구 결과들에 비추어 볼 때, 인공와우 이식술을 받은 청각장애아동들에게도 2Bi 접근에 의한 이중문화와 이중언어적 환경 구성이 꽤 중요함을 알 수 있다.

이상의 여러 선행연구 결과들을 종합해 볼 때, 우리나라의 농교육이 청각장애아동에 대한 인공와우 이식술의 급속한 보급에 대응하여 자기 정체성 정립을 위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는 자명해진다. 인공와우 이식술을 받은 청각장애아동의 청각-음성재활은 일차적으로 언어-청각전문가들에게 위임하고, 농교육자들은 다음 두 측면에서 체계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첫째로, 농교육자들은 농성인들(특히 농단체)과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는 가운데 농세계, 농문화, 농공동체와 일종의 파트너십을 유지하는 가운데 농인들이 사용하는 자연수어에 보다 친숙해져야 한다. 한국농아인협회 변승일(2006) 회장이 “농학교는 다른 특수학교와 달라서 특수학교 교사자격증만 있다고 교사가 될 수 없다”고 하면서 농학교 교사들이 수화에 능숙하지 못한 것을 정면으로 문제 삼은 적이 있다. 오늘의 한국 농교육계를 향한 따가운 질책으로 받아 들여야 한다.

둘째로 농교육계는 객관적으로 인공와우 이식술이 발달적인 측면에서 미치는 영향

을 언어적, 심리적, 사회문화적, 학업 성취적 측면 등에 걸쳐 다면적이면서 장기적으로 평가하는 타당한 자료를 축적해 가야 한다. 그래서 인공와우 이식술이 만병통치도 아니고 유일한 대안이 아니라는 것을 설득력 있게 보여 줄 수 있어야 한다. 청각장애아동에게 인공와우 이식술은 공학기술적인 측면에서 하나의 개가(빛)임에 틀림없으나, 동시에 그것은 윤리학적인 면에서 하나의 그림자로 드리워진다. 그리고 교육적인 측면에서 그것이 미치는 장기적 영향에 대한 평가는 아직 유보적 상태이다.

V. 결 론

이 시대는 격변과 혼란의 시대이다. 특히 우리나라의 상황에서는 서구사회가 순차적으로 밟아 온 모더니즘에서 포스트모더니즘으로, 산업사회에서 탈산업사회로의 이행(移行)이 동시다발적으로 압축되어 혼재(混在)해 있기 때문에 그 혼란은 더욱 심각할 수 있다. 농교육의 전통만 하더라도 우선 역사적으로 볼 때, 유럽은 250여년이나 되었고 미국은 꼭 190년에 이르는 연륜을 쌓아 왔지만, 우리나라는 이제 겨우 100주년을 앞두고 있다(사실 좀 더 엄격히 말하면 우리 힘으로 농교육을 자주적으로 실천한 것은 불과 60여년 정도이다). 게다가 1960년대와 '70년대까지만 해도 우리나라 농교육은 민간주도에 의한 사립농학교가 주축을 이루는 가운데 '80년대(특수교육진흥법 발효 이후)부터 공식 지원이 이루어지기 시작했다.

우리나라에서 특수교육이 공교육의 일환으로 자리 잡아 가는 것과 병행해서 '80년대 이후 한국 특수교육은 두 측면에서 중요한 변화가 일어나게 된다. 그 하나는 특수교육 인구구성에서 종래의 농교육과 맹교육 중심의 특수교육이 다수의 발달장애 영역중심으로 탈바꿈 하였고, 다른 하나는 일반학교 내에 특수학급 설치가 전국적으로 크게 확산되어 가면서 특수교육 전달체제가 분리교육 중심에서 통합교육으로 이행하는 것을 강조하게 되었다. 주지하는 것처럼 농교육은 분리교육으로서의 전통을 강하게 유지해 오는데, 우리나라의 경우 통합교육을 향한 정책적 지향성은 계속 강조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 통합교육을 감당할 만큼 일반학교가 질적으로 체구조화 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기존의 농교육은 심각하게 자기 정체성 혼란에 빠져 있다. '통합'을 향한 이념이나 노력 자체를 포기할 수 없는 일이지만 무리하게 통합을 서두 나머지 학년이 올라가면서 일반학교에서 농학교로 되돌아오는 청각장애학생이 늘어나게 해서는 안 된다. 독수리를 까마귀가 되도록 내버려 둘 수 없는 일이라면, 기존의 농교육은 스스로 질적 개혁을 통해 일반학교의 경쟁적 교실문화를 능가하는 교육의 품위를 유지할 수 있어야 한다.

통합교육과 맞물려 최근 청각장애아동에게 인공와우 이식술이 급속하게 파급됨에

따라 ‘농’과 농교육 존재의 자체가 크게 흔들리고 있다. 일부 선진한 나라들에서는 청각장애아동 2명 중 한 명은 인공와우 이식술을 받는 상황이라고 하는데, 이미 우리나라에서도 대도시 농학교의 유아반에 들어온 청각장애유아의 대부분은 인공와우 이식술을 받았거나 받을 예정에 있는 형국이다. 우리나라에서 이처럼 인공와우 이식술이 급속하게 보급되고 있는 것은(다른 나라에서 그 예를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이과(耳科) 의사들의 인공와우 이식술에 의한 ‘청각재활’의 확산과 그에 편승한 부모의 ‘소리세계’에 대한 삶을 건 열망이 어우러져 이제 인공와우 이식술은 ‘농’을 질병으로 규정하는 사람들에게 의해 ‘만병통치’인 것처럼 인식되고 있다.

그러나 인공와우 이식술에 대한 역사와 사례가 우리보다 훨씬 많이 축적되어 있는 나라들에서 수술 후의 변화를 장기추적 한 바에 의하면, 발달적인 측면에서 볼 때 결코 낙관할 수 없는 문제들이 여러 모습으로 지적되고 있다. 특히, 심리적으로 인공와우 이식술을 받은 청각장애아동이 물리적으로 청각재활은 어느 정도 되었다고 하더라도, 자신이 ‘농’의 세계에서 태어나고 자랐다는 자기 정체성마저 지울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어쩌다 출세한 흑인이 백인과 어울리는 기회가 늘어날 수는 있지만, 태생적으로 흑인이기 때문에 갖는 자기 정체성을 지워버릴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따라서 인공와우 이식술을 받은 청각장애아동은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난청인과 같은 경계인의 심리적 갈등을 겪게 된다.

의료적 관점에서 볼 때 인공와우 이식술은 과학기술의 개가임에 틀림없으나, 동시에 윤리적으로 심각한 문제를 수반한다. 농인의 입장에서 볼 때 인공와우 이식술은 농세계와 수어인(手語人; sign language peoples) 자체를 부정하는 말살책이기 때문에 농인을 향한 신식민주의적 침해이다. 지금까지 농교육계는 인공와우 이식술에 대해 침묵을 지킴으로써 일종의 중립적 입장을 유지하고자 했으나, 달리는 기차 위에 중립은 절대 없다. 청각장애아동에 대한 인공와우 이식술의 급속한 보급에 대응하여 우리나라 농교육자들은 농인과 농세계의 편에 서서 발달적인 측면에서나 윤리적인 측면에서 인공와우 이식술에 따른 역기능과 문제를 설득력 있게 전개해야 한다. 그렇게 함으로써 당장의 농교육의 정체성 위기는 언제인가는 새로운 기회로 전환될 수 있다.

참고문헌

- 강경숙(2005).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통합교육 비교분석. **국립특수교육원 제12회 특수교육국제세미나**. 313-374.
- 곽정란(2006). “농문화(들여다보기)”. 한국의 장애학 숨은 그림 찾기4. **저항하라**.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2006. 10. 44-49.
- 교육인적자원부(2007). **특수교육실태조사**. 서울 : 교육인적자원부.
- 교육인적자원부(2005). **특수교육운영계획**. 서울 : 교육인적자원부.

- 권순황(2001). 농문화 접근태도에 따른 청각장애학생의 언어선호도 연구(미간행). 대구대학교 대학원 특수교육학과 박사학위논문.
- 기무라, 이찌다(2002). “농문화와 언어: 언어적 소수파로서의 농인”. **농문화의 이해**. 서울: 농인사회정보원. 29-46.
- 김병하, 박경란(2007). 한국에서 통합교육의 현상과 과제. **제7회 세계장애인한국대회발표**(미간행). 2007. 9. 6
- 김병하, 조원일(2005). 한국에서 통합교육의 정책적 지향과 실천과제: 비교사적 관점에서. **특수교육저널: 이론과 실천**. 6(4). 37-53.
- 김병하(2003). **특수교육의 역사와 철학(개정판)**. 경북: 대구대학교출판부.
- 김삼수(2006). “인공와우 이식수술과 사후 프로그램에 대한 논의”. **인공와우 이식 수술의 현재와 미래 세미나**. Metlife Welfare Foundation. 2006. 9. 12. 67-81.
- 김영옥(2004). 농학생의 이중언어 능통을 위한 이중언어 교육 성공 조건 탐색. **특수교육학연구**. 39(2). 31-59.
- 박미혜(2002). 인공와우 아동 재활 프로그램에 관한 문헌고찰. **난청과 언어장애**. 25(2). 133-149.
- 박상희(2006). “인공와우 이식수술과 사후 프로그램에 대한 논의”. **인공와우 이식 수술의 현재와 미래 세미나**. Metlife Welfare Foundation. 2006. 9. 12. 51-60.
- 변승일(2006). 한국농아인협회장인터뷰. **함께걸음**. 2006. 3-4월호. 32-35.
- 아베야스지, 김병하(2004). 농인의 언어적 권리에 대한 이론적 고찰. **언어치료연구**. 13(1). 63-78.
- 이미혜(2006). “인공와우 이식수술과 사후 프로그램에 대한 논의”. **인공와우 이식 수술의 현재와 미래 세미나**. Metlife Welfare Foundation. 2006. 9. 12. 61-66.
- 임안수(2004). 장애아동 통합교육의 실천과제. **한국특수교육학회 춘계학술대회**(주제강연), 3-19.
- 中村滿紀男·岡典子·조원일(2005). 완전통합교육론과 저출현 장애아교육의 모순-미국 시각장애아교육의 관점에서. **특수교육저널: 이론과 실천**. 6(2). 301-322.
- 최성규(1999). 청각장애아 언어교육 방법론에 대한 패러다임 이동: 이중문화와 이중언어의 타당성. **특수교육학연구**, 33(2), 211-233.
- 최성희 역(2006). **덴마크 농아동의 이중언어 능력 지도**. 인천: 인천성동학교.
- 한국농아인협회(2006). 대통령에게 보내는 탄원서(미간행). 서울 : 한국농아인협회.
- 한국특수교육총연합회(2005). **전국특수교육요람**. 서울 : 한국특수교육총연합회.
- ACMR(2001). *Inclusion: From Vision to Reality, Policy and Action*. 15th Asian Conference on Mental Retardation.
- Alderson P.(2007). Consent to Surgery for Deaf Children : Making Informed Decisions. In Komesaroff, L.(Ed.). *Surgical Consent: Bioethics and Cochlear Implantation*. Washington, DC.: Gallaudet University Press. 30-41.
- Chen, Y.(2005). Police and development of inclusive education in China. *A comparative seminar of Inclusive Education in the Asia-Pacific Region*. 46-88.
- Christiansan, J. B., & Leigh, I. W.(2002). *Cochlear Implants in Children*. Washington, DC.: Gallaudet University Press.
- Evans, C.(1982). *Total communication*. 김병하 역(1984). **토틸커뮤니케이션: 구조와 전략**. 서울 : 재동문화사.
- Groce,N. E.(1985). *Everyone here spoke sign language*. 박승희 역(2003). **마서즈 비니어드 심사 랍들은 수화로 말한다**. 서울: 한길사.
- Kelsay, D. & Tyler, R. (1996). Children and cochlear implants. In F. Martin & J. Clark (Eds), *Hearing care for children*. Boston: Allyn & Bacon, 249-262.
- Komesaroff, L.(Ed)(2007). *Surgical Consent: Bioethics and Cochlear Implantation*. Washington, DC.: Gallaudet University Press.
- Ladd P.(2007). Cochlear Implantation, colonialism, and Deaf Rights. In Komesaroff, L.(Ed.).*Surgical Consent: Bioethics and Cochlear Implantation*. Washington, DC.:

- Gallaudet University Press. 1-29.
- Lane H.(2007). Ethnicity, Ethics, and the Deaf-World. In Komesaroff, L.(Ed.). *Surgical Consent: Bioethics and Cochlear Implantation*. Washington, DC.: Gallaudet University Press. 42-69.
- Lane, H. L.(1999). *The Mask of Benevolence : Disabling the Deaf community*. New York : Dawn Sign Press.
- National Institute On Deafness & other Communication Disorders(2002, 2006). *Cochlear Implants*(fact sheet). www.nidcd.nih.gov/health/hearing/채초.htm.
- Oliver, M.(1996). *Understanding Disability: From theory to Practice*. New York: Palgrave.
- Poon-McBrayer,K.F.(2005). Full inclusion for children with severe learning difficulties in Hong Kong : ideology and reality. *Journal of International Special Needs Education*. vol.8, 19-26.
- Preisler G.(2007). The Psychosocial Development of Deaf Children with Cochlear Implants. *Surgical Consent: Bioethics and Cochlear Implantation*. Washington, DC.: Gallaudet University Press. 120-136.
- Schildroth, A.N., and Hotto, S.A.(1994). "Deaf students and Full Inclusion: who wants to be excluded?". In Johnson, R.C., and Cohen, O.P.(1994). *Implications & complications for deaf students of the fill inclusion movement*. Gallaudet Research Institute Occasional Paper 94-2. Gallaudet University.
- Skrtic, T.M.(1995). *Disability & Democracy : Reconstructing [Special] Education for Postmodernity*. New York: Teachers College, Columbia University.
- Skrtic, T.M., Harris, K.R., and Shriener, J.G.(2005). *Special Education Policy and Practice*. Denver, Colorado, Love Publishing Company.
- Standis, D. J., Kozleski, E. B., and French, N. K.(2000). *Inclusive Education for the 21st Country*. Belmont, CA: Wadsworth.

Crisis of Identity on Deaf Education in Korea: The Problems and Issues

Kim, Byung Ha

Daegu University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inquire the problems and issues on inclusive education and cochlear implantations for the deaf students in Korea. Inclusive education for the deaf students in Korea present a dilemmatic problem between the public policy and the practical reality. To realize the full inclusion for deaf students in our country, school restructuring in public education was not established through the personalized qualitative renovation.

Also, cochlear implantations for children with hearing impaired is connected with inclusive education in Korea. Currently, the cochlear implantations are disseminated through the country for the infants with hearing impaired. In our country, the number of students with hearing impaired in deaf schools are rapidly decreased due to the disseminations of the cochlear implantations for the infants with hearing impaired. However, the cochlear implantations for children with hearing impaired have a dilemma in conflict with bioethics viewpoint.

To reconstruct the identity on deaf education in our country, deaf schools should be restructured forward the highly personalized education. And deaf education have to respect for the self-identity to keep partnerships with Deaf world and sign language peoples.

Key Words: deafness, deaf identity, inclusive education, cochlear implantations

논문 접수: 2007. 8. 4 심사 시작: 2007. 8. 5 게재 확정: 2007. 9. 22